

□ 정부시책 □

## 「장기전력 수급계획」 조정

통상산업부는 최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환경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말 확정할 예정이었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금년 3월말까지 수정·보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미래의 전력수요에 대하여 장기안정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국가 전력정책의 기본계획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동계획을 10년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매 2년마다 수정·보완하도록 되어 있다.

### 〈 '95 장기전력 수급계획상의 전력수급 전망 〉

구 분	판매전력량(kWh)	최대전력(kW)	설비용량(만kW)	설비예비율(%)
'97	1,956	3,548	3,995(4,145)	12.6
2000	2,393	4,356	5,196(5,276)	19.3
2005	3,059	5,567	6,618(6,793)	18.9
2010	3,656	6,564	7,820(7,955)	19.1

\* ( )내는 연말기준

### 〈 '95 장기전력 수급계획상의 설비구성 〉

(단위 : 만kW, %)

구 분	1995	2000	2005	2010
원 자 력	862 (26.8)	1,372 (26.0)	1,872 (27.5)	2,633 (33.1)
석 탄	782 (24.3)	1,583 (30.0)	2,203 (32.4)	2,170 (27.3)
L N G	674 (20.9)	1,420 (26.9)	1,621 (23.9)	2,201 (27.7)
석 유	592 (18.4)	514 (9.8)	550 (8.1)	353 (4.4)
수 력	309 (9.6)	388 (7.3)	548 (8.1)	598 (7.5)
합 계	3,218 (100)	5,276 (100)	6,793 (100)	7,955 (100)

최근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7.0% 보다 낮은 3% 수준으로 전망되고, 환율 급등 및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전력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더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부는 향후 전개될 장단기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장단기 전력수요를 재예측하고 이에 따라 발전소 설비계획 및 송변전 설비계획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금번 교토 기후변화협약회의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의무부담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0%를 점유하고 있는 전력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하여 원자력 및 LNG 발전소 건설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환율급등 및 금융시장 경색에

따라 한전의 전력설비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향후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8조 내지 9조원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발전원별 경제성 제고와 민자발전사업 물량(현재 : 원전 제외 신규발전소의 50%) 확대 등을 통하여 한전의 투자재원 조달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장기전력수급계획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95년에 수립한 계획을 그간 여건 변화에 따라 연동화하기로 하고, 8개 실무소위원회를 운영하여 동계획의 시안을 작성하여 공청회 및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내에 동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전력산업구조 개편 세미나 개최

통상산업부는 최근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바람직한 구조개편 방안에 관한 토론을 가졌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한전의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전력 서비스 향상을 기하고자 지난 '95년 이후 발전 사업에 민간의 참여(1차사업자 선정 :

'96. 12월, 2차사업(대구민자발전)자 선정 : '98. 1월)를 촉진하는 민자발전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발전 부문뿐 아니라 송·배전 과 전력 판매에 이르는 전력산업 전반에 관한 구조개편 방안 수립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위원 회를 구성·운영중에 있다.

금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 등 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토의가 있었 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작 업에 참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며 금번 세 미나에서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금년말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 주요 발표요지(각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일본형 : 지역별 민영에 의한 발·송·배 전 독점
  - 미국형 : 민영에 의한 발전 부문의 경쟁 과 송·배전 독점
  - 영국형 : 민영에 의한 발·배전 경쟁과 송전 독점
  - 프랑스형 : 발·송·배전의 국영 독점체 제하에 발전부문의 부분적 경 쟁 도입

<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 배경 >

1. 추진경위

- '93. 10 공기업 경영쇄신방안 마련에 관

한 대통령 지시

- '93. 1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에서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정
- 이에 따라 '94. 7 ~ '96. 6월까지 한전 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 진단기관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삼일 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 '96. 7월 경영진단 용역 최종보고서 발표

2. 경영진단 결과

- 민영화 여부
  -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전력 수용 추 세, 전력유통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지정 학적 위치, 민영화시의 경제력 집중문제, 한전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시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시급하지 않 은 것으로 결론
- 구조개편의 필요성
  - 발전 송전 배전의 수직적 통합을 통한 한국전력의 공기업 독점체제는 경제성장 에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여 수 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 했으나,
  - 전력 공급규모 팽창에 따른 규모의 경 제에 대한 논의와 독점의 비효율성, 일 반적인 규제완화 추세 등으로 구조개편 의 필요성이 제기

## 유도전동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중소기업청은 전산업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자본재산업의 주축인 유도전동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9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유도전동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 유도전동기는 국내 여타산업에 비해 발전과 개선의 여지가 많은 기술개발 단계에 있으며 국내 50여개 유도전동기 생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다품종 소량생산의 중소기업형 산업으로
-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40%를 소모하는 유도전동기는 가전기기, 전동공구 등 전산업용 기계 등에 사용되는 중요한 기반기술산업이나
- 국내 중소 유도전동기 생산업체는 기술개발과 설비투자가 미흡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중국,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중간 수준에 위치하고, 기술력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있어 '96년도에 300백만불의 무역수지 역조를 기록하였으며
- 가격보다는 제품의 품질경쟁력이 구매를 좌우하므로 후발개도국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

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중소기업청에서는 '97. 8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47개 중소 유도전동기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초로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가능성 있는 생산업체를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동 경쟁력 강화방안의 기본목표는

- 현재 유도전동기 기술축적은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기술도입에 의한 모방단계에서 이를 개량하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로의 발전 및 자체 기술 개발능력을 제고시키고
- 생산방식도 숙련공 생산방식에서 컴퓨터에 의한 설계 및 자동화 설비에 의한 무인화 생산체제로 전환케 하며
- 주력 수출품인 범용 저가제품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제품으로의 수출을 전환시키는 것임.

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 업체간 공동연구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표준화사업 등을 위하여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내 “유도전동기 중소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고
- 도입기술의 소화, 응용능력 배양을 위해 국립기술품질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등과 연계시켜 국내

- 외 기술이전 정보의 중계·알선 및 기술 도입시 기술의 적정성을 평가토록 하고
-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에서 자체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요원이 해당연구소에 상주하면서 기술인력, 실험장비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소량다품종의 다양한 유도전동기 제품에 대한 규격을 제정하여 제품의 호환성, 범용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공용화) 작업을 추진하고
- 수출촉진을 위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

장한 ISO, CE마크 등 국제인증마크를 공동으로 획득하여 소요경비를 절감하고, 해외전시회에 업계 공동의 한국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번에 수립한 유도전동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선진국에 배해 우위에 있는 가격경쟁력은 계속 유지시키고 중국, 대만, 멕시코 등 개도국과는 제품 차별화를 통해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2001년부터는 우리는 고기술, 고부가가치제품의 수출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98 단체수의계약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 공고

중소기업청은 최근 IMF 협의체제하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10% 이상씩 축소해 왔던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금년에는 축소하지 않고 작년 수준을 유지·시행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98년 단체수의계약물품수를 작년보다 2개 축소된 258개로, 중소기업간 경쟁대상은 작년보다 9개가 늘어난 105개 품목을 '97. 12. 31자로 지정·공고 하였다.

'97 단체수의계약품목중 셀로판접착테이프

등 7개 품목이 '98 품목에서는 제외되었고, 활성탄 등 5개 품목이 신규 지정되어 2개 품목이 줄었으나, 주철재 가로등주 및 철개가 주물제품으로 통합되는 등 4개 품목이 2개 품목으로 통합·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7년과 같은 수준이다.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98 단체수의계약품목 지정시 제외한 셀로판 접착테이프 등 9개 품목을 확대하여 단체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관련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당분간 중소기업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98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전년수준으로 지정·공고한 취지는 최근 IMF 금융협약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워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앞으로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품목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 제도를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98년 단체수의계약품목은 '97년에 비해 2개 품목이 축소(4개 품목이 2개 품목으로 통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전년과 동일)된 258개 품목이며 95개 생산조합, 9,200여 중소기업이 수의계약에 참여하게 된다.

'97년 지정품목중 이번에 지정제외된 품목은 납품실적미달(기준: 연간 3억원 이상)인 유리조합의 유리병 등 2개 품목을 비롯하여 모두 7개 품목이며,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2개 품목(석회석, 소방펌프차)과 조합신설에 따른 3개 품목(활성탄, 액자, 제어반·자동) 등 5개 품목은 신규로 포함되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65년 도입된 이래 안정적인 물량이 확보됨으로써 관련 중소기업이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는 등 경쟁력 향상에 오히려 역행한다는 일부 의견과 정부조달시장의 개방 등 대외시장 개방 추세에 맞춰 지난 '84년 이후 매년 10%

이상씩 축소 운영하였으나 최근의 경기침체 및 IMF 금융협약체제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어렵게 된 점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전년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다.

'98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은 '97년 단체수의계약에서 지정 제외된 품목등 9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였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는 정부 및 공공기관 구매시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은 금번 단체수의계약에서 지정 제외된 품목을 모두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최근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단체수의계약품목을 축소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전년수준을 유지토록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판로보호를 통하여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 제도를 중소기업의 보호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전기분야 단체수의계약 품목

◇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 ◇

<p>▲ 전기조합 △개폐기, 절연수동 및 자동(가공설치용의 것으로 SF6가스 개폐기에 한함) △클램프(전기용에 한함) △무정전전원장치 △변압기 △발전기, 디젤엔진(1,000Kw 초과 및 해상용, 방음형은 제외) △정류기, 부동용</p> <p>▲ 자동제어반조합 △제어반, 자동(전기조절장비로서 자체 프로그램 또는 외부 명령에 의하여 감시 및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한함. 단, 수처리제어설비, 조명제어설비, 주차관제제어설비 제외)</p> <p>▲ 전선조합 △전화선(비닐절연, 옥외전화선, 옥내전화선, 감심옥외전화선 포함) △케이블, 제어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OW)</p>	<p>△점파선(나이론 피복 2개 연점파선, PVC 점파선, ESS점파선 포함) 감심알미늄연선(ACSR-OC를 포함하며, AW는 제외) △600V 비닐절연 전선(IV)</p> <p>▲ 전등기구조합 △형광등 및 백열등기구 △전광판(체육관, 경지장용 제외)</p> <p>▲ 조명조합 △자동점멸기(조명제어장치 포함) △가로등기구(보안등, 터널등, 방폭등기구, 제어장치 포함) △안정기(형광등용 제외) △투광등기구(탐조등 및 조명탑 포함) △무대조명장치 △방전등램프(수은, 메탈, 나트륨램프 포함) △형광램프 △교통신호등(제어장치 포함)</p>
------------------------------------------------------------------------------------------------------------------------------------------------------------------------------------------------------------------------------------------------------------------------------------------------------------------------------------------------	---------------------------------------------------------------------------------------------------------------------------------------------------------------------------------------------------------------------------------------------------------------------------------------------------------------------

◇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p>▲전기조합 △차단기, 누전 △애자(내오손용 결합, 지지라인 포스트, 저압인류; 현수) △배전반(154Kv, 345Kv용 보호배전반에 한함) △전압조정기(AVR)에 한함 △리액터(분로용 제외) △충전장치(충전기)</p> <p>▲자동제어반조합 △계장제어장치(수처리설비에 한하며, 일일처리능력으로 하·폐수는 3만톤, 상수는 10만톤 이하에 한함)</p> <p>▲ 전선조합</p>	<p>△연동선 △케이블, 시내(PE절연알루미늄차폐케이블, PE 시내쌍케이블, LCP시내케이블을 포함하며, 폴스킨케이블은 제외함) △케이블(셀프)써포오팅</p> <p>▲조명조합 △가로등전주(철제 및 주철제는 제외) △스포트라이트 △항공유도등(제어장치 포함)</p> <p>▲전등기구조합 △전기스탠드 △산테리아</p>
-----------------------------------------------------------------------------------------------------------------------------------------------------------------------------------------------------------------------------	----------------------------------------------------------------------------------------------------------------------------------------------------------------------------------------

## 국립기술품질원, 전기·전자제품 독일과 인증 합의

국립기술품질원은 최근 독일전기전자기술 자협의회의 시험·인증시험소(VDE)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서로 인정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유럽연합(EU)에 전기전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앞으로 국립기술품질원의 시험에 합격하면 유럽지역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에 전기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유럽 연합 업체들도 VDE의 시험성적서만으로 우

리나라에서 '전'자(자) 마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이번 VDE와의 상호인정 합의로 전기전자기기를 유럽에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체들이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업체들이 EU 지역에 전자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현지로 가져가 현지에서 시험을 거침으로써 수수료 운송비 부담과 소요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어 왔다.